

■ 현장과 시각 ■

서남해안 개발, 한목소리 내야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서남해안 종합개발 사업의 지원근거가 될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별법에 명시될 '개발 대상 지역'을 둘러싸고 일부 기관·단체들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다, 민간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시·도민 추진회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목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난 현상이었다.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시·도민회의' 대표로 선임된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는 "지원 대상지역은 일단 목포와 무안, 신안 등 3개 지역으로 국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능한 만큼 당장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중득 목포시장도 "해남과 영암 등은 기업도시 특별법과 F1특별법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지원 대상 지역으로 삼기보다는 앞으로 목포, 무안, 신안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표인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암, 해남 등 J프로젝트 부지도 함께 포함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 개발 대상 지역을 목포·무안·신안으로 국한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회장은 "목포가 발전하려면 주변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보더라도 특정 지역만 지원하기보다는 더욱 넓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서남해안 종합발전 구상'의 대상 지역에 J프로젝트 지구인 영암·해남을 포함하고, 강진·완도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겨냥, "도지사로서 하는 소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물론 특별법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견이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라는 대명제만을 내세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차원에서 모처럼 추진되는 '서남해안 특별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이해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 '나만 옳다'는 아집은 오판과 불행의 부른다.

/redplane@kwangju.co.kr

'성년' 맞은 회담... 한반도 '봄소식' 기대

■ 20차 남북장관급회담 오늘부터 본격 협의

'2·13 합의' 이행 의지 확인...경협·인도적 지원 핵심 의제



27일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한 이재정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권호용 북측 수석대표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7일 평양에서 개막됐다. 남북 고위당국자가 얼굴을 맞대는 것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회담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2일까지 3박4일간 개최된다. <회담 일정>=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52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후 3시 아시아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거쳐 1시간 만인 오후 4시16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 장관을 비롯해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과 박양우 문화부 차관,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 통일부 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측은 권호용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주중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식 내각 참사, 맹경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전중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5명으로 대표단이 꾸려졌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도착 직후 고려호텔에 여장을

을 풀 뒤 저녁에는 북측 박봉주 내각 총리가 주최해 양각도호텔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남북 대표단은 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남측 대표단은 회담 마지막날인 3월2일 오전 종결회의를 가진 뒤 오후 3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귀환할 예정이지만 회담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의미>=이번 회담은 6·15남북공동선언 다음 달인 2000년 7월 첫 회담이 열린 이후 6년 만에 회담 차수로 '성년'을 맞는 상징적인 자리다.

나아가 6차회담 당사국 가운데 2·13합의 이후 첫 당국 간 고위급 공식 회담이라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의 2·13합의 이행의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관전포인트>=우리 측이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는 크게 2·13합의 이행 문제, 남북경협 현안, 인도적 사안, 하위 회담 일정 확정 등이 될 전망이다. 2·13합의 이행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거 회담

에 비춰 당연해 보인다. 북핵 문제는 2002년 10월 북핵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같은 달 19~22일 열린 8차회담 때부터 우리 측이 장관급회담에서 매년 핵심 의제였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이나 인도적 사안의 경우 종전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에 포인트가 맞춰질 전망이다.

경협 쪽에서는 일단 작년 5월 북측 군부의 반대로 무산된 열차시험운행이 최대 관심사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이나 제2차 국방장관회담의 날짜를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측 군부의 판단에 달려 있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반도 평화체제 회담 계획"

송민순 외교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한반도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시아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심포지엄 오찬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차회담 당사국인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전체 문제를 협의한 뒤 이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포기를 이끌고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안보, 경제 등을 총망라한 다차원적인, 입체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설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직접 당사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러한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혀 6자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남·북·미·중 4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오찬사에서 "2·13합의"는 북한 핵 폐기로 가는 긴 과정에서 첫 걸음이 고 9·19공동선언이 전체 설계서라면 초기 시방서에 해당된다"면서 "늦더라도 앞으로는 굴러가고 뒤로는 굴러가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결과가 향상된 경우에는 연임되지만, 반대로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할 경우 해임된다.

지금까지는 업무성과가 공기업 사장의 임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정부는 또 행정부 및 산자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도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업무불량' 공기업사장 퇴출

정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연임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성과, 기관경쟁 및 계약이행 실적 등 각종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거나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평가

결과가 향상된 경우에는 연임되지만, 반대로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할 경우 해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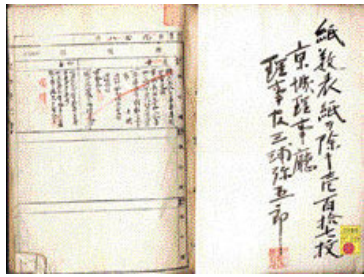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업무성과가 공기업 사장의 임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정부는 또 행정부 및 산자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도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日, 을사늑약 전부터 한국땅 '군침'

대법원, 日영사관 발행 건물·토지 등기부 대거 발견

일제가 을사늑약 체결로 통감부를 설치하며 우리나라 내정에 본격 간섭하기 시작한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사들인 서울 시내의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관리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003년 말부터 시작한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합병 이전 경성(京城)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잡지방(雜地方) 건물등기부 제4판'과 '주동(鑄洞·현 중구 주자동 일대) 토지등기부 제3판'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1904년(명치 37년)부터 1914년까지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지금의 중구 회현동 일부인 옛 장동(長洞)의 대지 638필에 지어진 건물 19평의 목조 건물을 시대하라(幣

原)가 1904년 1월 취득해 2년 뒤 모토노부(本信)에게 팔고, 그가 1907년 일본 다카마쓰(高松)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권농(勸農)주식회사에 넘기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건물등기부 3판은 통감부가 등기부 전 단계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 시행했던 1906년부터 두 해 앞선 1904년 1월부터 작성됐다는 점에서 일제가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를 침탈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사 3·1절 전국마라톤대회. Includes logos of sponsors like GS, SK, and various local businesses. Contact information: 229-0541.